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양적' 삭감 예고

SOC '예산칼질' 직격탄 또 맞나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내년도 SOC 예산이 또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 당국은 이미 그간 공언했던 '질적 구조조정'을 철화하고 SOC를 포함한 주요 지출분야별로 예산 삭감대상을 물색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면

6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서 접수에 이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큰 틀에서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재정 총지출은 앞서 공표한 증가율(연평균 5.8%)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은 당초 계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위해 주문 기재부 '질적' 구조조정 철화 부처별 감축대상 선별작업 착수 내년 SOC 16조원도 붕괴 우려

획했던 453조원을 넘어 최대 4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와 별개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예산안 수립 후 앞으로는 '양적'이 아닌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 만에 말을 바꿨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부처와의 예산협외와 병행

해 감축대상 선별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상당수의 SOC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마당에 적어도 지난해 수준은 (삭감)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SOC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기재부는 SOC 분야에서만 전체 구조조정(11조원) 액수의 40%에 달하는 4조4000억원을 삭감해 17조7000억원(정부안)을 편성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상 내년도 SOC 예산은 이보다 4% 줄어든 17조원으로 설계돼 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정부가 '마른 수건 짜기'에 나선다면, 내년 SOC 예산은 16조원선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d@**

SOC예산 '쥐어짜기'... 인프라 서비스 질 저하 '부메랑'

도로예산 '씩둑'... 전국 도로 연장·포장사업 '정체'

지난해 연장 1.1%, 포장률 0.2%P 증가 그쳐... 교통여건 악화 불가피

전국 도로 연장과 포장률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도로연장과 포장률의 상승 곡선이 갈수록 완만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도로서비스에도 경고등이 켜질 것으로 우려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로 연장은 11만91km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관련기사 4면

도로 연장은 지난 2015년 10만7527km로, 전년에 비해 1.8% 증가한 이후 2016년(10만8780km) 들어 증가율이 1.2%로 둔화됐고, 작년에는 더 축소됐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중 도로부문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만큼 현재 추세대로라면 도로 연장 증가율이 1% 아래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국토부의 도로 예산은 5조

8899억원으로, 전년(7조3534억원)보다 무려 20% 가까이 급감했다.

이마저도 국경과제에 포함된 도로나 완공을 앞두고 있는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재정당국의 SOC 예산 축소 기조를 감안할 때 내년 도로 예산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로 연장 증가 속도가 더욱 더뎠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 포장률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도로 포장률(9만4549km)은 92.8%로,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증가에 머물렀다.

2014년(8만9701km)과 2015년(9만1195km) 0.5%포인트씩 늘어나다가 지난해 들어 포장률 증가폭이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이다.

도로연장과 포장률의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곳곳에서 도로서비스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인구당 도로연장을 보면 1000명당 도로 연장이 전국 평균 2.13km인 가운데 서울은 고작 0.84km, 부산은 0.96km로, 1km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1.08km), 대구(1.14km), 광주(1.26km), 울산(1.82km) 등 광역시들도 인구 1000명당 도로 연장이 1km대에 그치며 평균 이하를 맴돌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열악한 도로 서비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로연장과 포장률이 정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라며 "인구에 비해 도로연장이 짧은 지역의 경우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확장하지 않으면 도로서비스가 나빠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연평균 삭감률 최대 'SOC'... 이번에도 '감축 1순위' 관측

(2017~2021 12개 분야별 재정운용계획)

정부가 다시 한번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는 어디일까.

전문가들은 어김없이 SOC를 1순위로 꼽는다.

정부는 크게 12개 분야별 지출 소요를 토대로 한해 전체 예산안을 편성한다. 5년 주기 중장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도 12개 분야별 지출 추이에 따라 재정 편성 규모를 설계한다.

12개 분야는 지출 규모상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비롯해 △교육 △문화·체육·관광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수산 △식품 △환경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 △지방행정 등이다.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예산을 감축하는 분야는 SOC와 △환경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 △식품 등 모두 5개뿐이다.

이 중 연평균 삭감률만 놓고 보면 단연 SOC가 타 분야를 압도한다.

SOC 재정지출의 감액률은 연평균 -7.5% 수준으로, 차순위인 환경(-1.6%)이



일자리·저출산 대응 명목으로 복지·교육 등 대규모 증액 예고 남북 훈풍 영향 외교·통일 늘 듯
전문가들 “과도한 SOC 예산 감축 저소득층 소득·일자리에 직격탄 건설투자 경제효과 간과 말아야”

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1.5%) 등의 4~5배에 이른다.

이는 사실상 SOC 분야가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추진하는 지출 구조조정에서도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도 이미 올해 SOC 예산이 전

년 대비 20%(정부안 기준)나 축소됐지만, 12개 분야별 정부의 정책기조를 따져 보면 SOC가 지출 구조조정의 ‘갈날’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삭감 규모 또한 최소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삭감률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앞서 내년 SOC 예산으로 올해 대

비 4.0% 축소된 17조원을 예고한 바 있지만, 추가 삭감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보건·복지·고용 분야나 교육예산은 이미 일자리 및 저출산 대응 명목으로 대규모 증액이 예고된 상황이다.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외교·통일분야 예산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공질서·안전 및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증액은 기정사실이다.

또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사월급 인상 등을 감안하면 국방예산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R&D 분야 또한 지출이 늘어날 게 자명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SOC를 제외하면 환경,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 △식품 분야 정도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우대 및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육성,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하면, 이들 분야의 지출 규모 삭감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내년 예산안에서도 SOC 구조조정이 가장 두드러질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SOC 예산의 과도한

삭감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SOC를 포함한 건설투자가 국가 경제, 국민 생활, 안전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리한 SOC 예산 축소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나 일자리에도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건설투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효과와 거리가 멀다는 부정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는 무상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무조건 SOC 등 건설투자만 옥죄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저소득층의 소득, 그리고 일자리는 외면하는 행태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국내 경제상황은 경기후퇴에서 침체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특히 설비투자 와 함께 건설투자 부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분배 위주의 재정정책 방향보다는 하방리스크 관리를 위한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방송권기자 skbong@